

가로수에 가린 도로표지판 운전자 혼란·사고위험

가로수 가지치기 안해 추돌 상황 연출 등 위험천만 지워지고 녹슨 채 방치...광주시 "일괄 보수작업 진행"

“다 가려져 있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에요. 보려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
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요.”
시민들의 이정표가 되는 도로표지
판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가로수와 신호등에 가려 도로표지판
의 글자가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이 혼란
을 겪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표지판이 녹
슨 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목
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동문
에서 북구정으로 향하는 도로 옆 보행로.
이 일대는 가로수 가지와 잎사귀가 표지
판을 가려 표지판 내용과 지정 차선을 확
인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여야
만 했다.
한 운전자는 표지판을 확인하기 위해
옆 차선으로 급하게 이동하다 기존 주행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
됐다.
동구 금남로 4가에서 유동사거리 방면
으로 향하는 도로 표지판 상황도 마찬가
지였다.
가지치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가로수가 표지판의 절반 가량을 덮어 동
구정 위치와 남은 거리는 가까이에서 조
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민들은 가로수에 표지판이 제
기능을 못 할뿐더러 전방 시야가 확보되
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
를 냈다.
운전자 윤모(41)씨는 “표지판을 확
인하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표지판 내용마저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
했다.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도로 표지판이 가로수에 뒤덮여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인재영기자

또 다른 시민 이모(35)씨는 “여름이
지났지만 무성해진 나무가 표지판을 가
리는 곳이 너무 많다”며 “가로수뿐만 아
니라 도로 시설물이 겹쳐 보이지 않는 지

역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 표지판은

신호등과 겹치다시피 위치해 운전로를
따라 중앙지구로 향하는 표지판 내용을
가리기도 했다.
시민 최모(56)씨는 “네비게이션이
익숙하지 않아 도로 표지판에 의존하
는데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마다 당혹스럽다”며 “특히 초행길
에선 표지판이 든든한 이정표인데 제
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곳을 지날 때
마다 주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심 곳곳에 녹슨 채 방치된
표지판도 즐비하다”며 “도시 미관마저
저해하는 도로 표지판에 즉
각적인 조치와 실질적 관리가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 표
지판 정비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도로 복
구 차량의 자체 순찰로 확인 후 진행된
다”며 “정비가 필요한 가로수는 자치
구 공원녹지과에 정비를 요청하고 훼손
된 도로 표지판은 10여개 이상이 접
수된 후 일괄 보수 작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인재영기자

“학동참사 수사 경찰, ‘문흥식 해외 도피’ 제보 목살”

이형석 국감서 지적...“수사팀 전면 교체해야”

광주 ‘학동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
찰관이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문흥식 씨의 해외 도피 정황을
사전에 제보를 받았으나 목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은 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학동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범죄수사대 김모 팀장이 문
씨 해외도피 정황을 제보받았으나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살했다”고 밝
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중순 학동4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았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대면 및 전화 인터뷰

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공익제보를 한 조합원 A씨는 문 씨
해외 도피 이틀 전인 지난 6월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광주경찰청 김모 팀장(경위)에게 “문
씨와 또 다른 브로커 이모 씨가 해외로
달아나려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학동 4구역 재
개발과 관련한 각종 불법 비리 사항을 김
팀장에게 제보해왔다. 지난 6월11일에는
김 팀장 요청으로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학동 참사와 관련한 사안을 진술했다. A
씨는 그때 문 씨 도피 정황을 제보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문 씨 해외 도피 제
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았고 문 씨는 지난 6월13일 미국으로 도

피했다. 경찰은 문 씨 송환을 위해 경찰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
나, 정작 문 씨는 비자 만료로 도피 3개
월만인 지난 11일 자진 입국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금품
을 받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
고 있는 문흥식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학동 참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문흥식 씨를 피의자로 전환
하기 위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출국한
사실을 알았고, 미처 관련자로 특정되기
전에 해외 도피가 이뤄졌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문 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
상에 오른 적이 있고 ▲학동 3구역 재개

발 사업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실
형(정역 1년 추징금 5억원)을 받은 ‘동
종 전과 전력자’라는 점에서 ‘관련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해명은 수
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문 씨 제보를
목살한 김 팀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변
호사법 위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최
근 검찰에 구속돼 학동 참사 수사 경찰
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학동 참사와 관련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문흥식 씨의 해
외 도피 제보를 목살했다는 조합원의 증
언을 듣고 참담했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불신이 쌓이고 있는 만큼 경찰 수
뇌부는 지금까지 수사상황에 대한 감찰
을 실시하고 수사팀 전면 교체를 고려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촉구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10월 총파
업에 앞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5일 광주지
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제해기업처벌법·직장내괴롭힘금
지법·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자 차별을 폐지하라”며 “5인 미만 사업
장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로기준
법 11조를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이어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
고 있다”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
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
다”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유
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
해도 수당은 연감생심이고 52시간을 넘
겨 일해도 막아줄 법이 없다”며 “이런
것이 부당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현행
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큰 사업체를 쪼
개서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거
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킨다”
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총 광주전남본부
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
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

호하지 않는 법은 단단히 잘못됐다”며
“코로나19로 권리 없는 노동자들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려 양극화와 차별은 심
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차별받
는 노동자들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자 차별폐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정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영기자

‘소음 갈등’ 투숙객에 흥기 휘둘러

숙박업소에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투숙객에게 흥기를 휘두르고 경찰
관까지 공격한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중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광주 동
구 한 숙박업소에서 흥기로 다른 투숙객
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에게도 흥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장기간 투숙 중인
A씨는 다른 투숙객이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흥기에 다친 피해자 모두 생명의는 지
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
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동수기자

광주 촉법소년 비수도권 중 ‘최다’

절도, 폭력, 강간·추행, 방화 순

광주지역 촉법소년이 비수도권 가운
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김용관 의원(대구 달서
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
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

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촉법소년
은 421명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
외하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
다.
광주는 2016년 137명, 2017년 205명, 2
018년 246명, 2019년 280명, 지난해 421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225명, 198명, 212
명, 301명, 345명으로 2017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6천576
명, 2017년 7천533명, 2018년 7천364명,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천694명의 촉법소년이 범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2만1천198

건, 폭력 8천984건, 강간·추행 1천914건,
방화 204건, 기타 7천344건 순으로, 지난
해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
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천5
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천768
명, 만 11세 3천571명, 만 10세 2천238명
순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
가 증가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